

<붙임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조사결과 요약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결과 요약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85.5%) 공감대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감옥으로 보내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다는 의견이 85.5%에 달했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19.8%에 그쳤다. 유엔권고를 받아들여서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87.5%)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한국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85%) 역시 동일하게 높은 동의를 받았다.

병역이행 형평성에 대한 우려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동의하면서도, 전문가들은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많은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달했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에도 40.2%가 찬성했다. 이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합숙 형태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분야 대체복무를 선호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의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은 선호했다. 먼저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 이하(45.2%)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다. 2배(26.2%)와 현역과 같은 기간(17.9%)이 그 뒤를 이었다. 복무형태는 합숙형태가 57.9%로 과반을 넘는 응답을 보였다. 국방부의 2007년 9월 안에서 제시한 '사회복무 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의 배치에 대해서 80.7%가 찬성했는데 이는 높은 복무 난이도를 통해서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한 응답이라고 보인다. 복무 분야는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76.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신청 사유는 종교적 신념을 포함하는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서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를 병역거부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종교적 신념으로 한정한다는 국방부의 안에 대해서도 69.9%가 반대했으며, 바람직한 대체 복무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도 74.9%가 반전 평화주의의 신념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복무 신청 시기는 군 입대 이전까지로

과반수가 넘는(59.6%) 전문가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군 입대 이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예비군 병역거부에 있어서는 25.5%가 병역거부 가능 시점이라고 응답했다. 현역 복무중에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은 14.9%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 선발인원 제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63.2%의 사회지도층은 제도 도입 초기의 선발인원 제한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보수적인 응답결과를 보여주었던 국회의원 집단보다 가장 진보적인 언론인 집단의 찬성률이 높은 것은 선발인원 제한의 방식이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이끄는 방식으로도 사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집단별로는 국회의원 집단이 가장 보수적이며, 언론 집단이 가장 진보적임

한나라당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응답자 중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의 의석 비율과도 유사한 비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집단의 응답결과가 다른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대부분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언론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가장 진보적인 응답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국방부 안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설문응답에서는 각각의 집단이 서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집단 내부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 불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음

집단 내부를 분석해보면 국회의원 집단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종교인 집단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국회의원 집단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35.5%가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은 21.4%에 그쳤다. 복무기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32.3%가 1.5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은 50%가 1.5배 이하에 찬성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 집단 역시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했을때에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즉,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국회의원 집단의 보수적인 측면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실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국회의원 집단 내부의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지만, 민주노동당의 표본이 너무 작아서(3명) 비교하지 않았다.

종교인 집단 내부에서도 불교과 기독교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대체복무제 도입이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불교는 56.9%가 찬성한 반면 기독교는 96.7%의 찬성을 보였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사유에서도 불교는 54.2%만이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독교는 96.8%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온 원인중 하나로 응답 과정에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기에 기독교 집단의 표본이 이 문제에 동의하는 집단으로 조금 치우치게 되었다. 또한 불교쪽 방문조사를 진행한 조사원의 전언에 따르면 불교 쪽에서는 이 문제를 낫설어 했으며 내부에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2.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총 인원은 총 554명이다. 각 영역별 응답인원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 51명 (한나라당: 31명 / 민주당: 14명 / 자유선진당: 1명 / 친박연대: 1명 / 민주노동당: 3명 / 무소속: 1명), (지역구: 38명 / 비례대표: 13명)
- 법률가 : 30명
- 교수 : 99명 (법학과: 13명 / 정치학과: 20명 / 경제학과: 10명 / 사회학과: 27명 / 사회복지학과: 25명 / 기타 1 / 결측값 3)
- 언론인 : 109명 (신문: 52명 / 방송: 45 / 인터넷매체: 12)
- 종교인 : 263명 (개신교: 31 / 불교: 72 / 천주교: 158 / 결측값 2)
- 기타 : 2명